



---

이슈브리프  
**ISSUE BRIEF**

---

발행일 : 2020년 6월 25일 (목)

**CONTENTS**

- 악화일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 ‘남북 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선언’을 중심



# 이슈브리프

(IB 2020-06)

---

## CONTENTS

I. 악화일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 1

II.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 12

III. ‘남북 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선언’을 중심 / 17

---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편집인: 이윤식

편집위원: 김창배, 나경태, 김태원(외부)

편집간사: 김진솔

발행일: 2020년 6월 25일   인   쇄: 디엔시파크



# Contents\_

금주(6월 4째주)에는 재정건전성 회복, 데이터청 설립, '남북 공동선언' 점검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文정부의 무리한 확장재정의 문제점을 지적,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며, 제2편에서는 4차산업 시대에서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3편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제1편: 악화일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 장경수 선임연구원)

전대미문의 확장재정으로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재정 불감증을 드러냄. 하지만 非기축통화국, 막대한 공기업 부채, 초고속 고령화, 재정승수 급락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우리 재정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의 세제개혁 △경제개혁을 통한 재정승수 제고 등이 시급. 이와 함께 재정이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재정준칙' 수립과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 감시기능'의 확립이 필요

## 제2편: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김신의 연구원)

4차 산업 시대·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 됨. 현재 공공데이터의 경우 부처별로 각기 생산 관리 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며, 민간분야에서도 기업별 역량이 천차만별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 이에 △중·장기 데이터 전략 수립 △법·제도 혁신 △표준·거래 지침 제시 △분쟁 조정기능 역할 등을 담당할 거버넌스 기구설립 필요

## 제3편: '남북 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선언'을 중심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최근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강경도발 위협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체결된 '6·15 선언'이 얼마나 잘 실현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20년전 6월,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6·15선언'에 서명했으나, 실상 북핵 폐기를 통한 평화라기보다는 연방제통일에 방점을 둔 것이었고, 북핵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허약한 평화'였음이 증명. 특히 북한은 지속적으로 '6·15선언'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발을 자행해 왔으며, '하노이 노딜' 이후엔 대북제재 완화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상황. 이런 차원에서 '6·15선언'은 더 이상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아닌 바 '사망 선고'를 내리고, 앞으로는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고, 군사도발에는 단호한 대비태세로 응징하며, 대북제재를 더욱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1. 악화일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작성: 김창배 경제사회연구실장, 장경수 선임연구원

전대미문의 확장재정으로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재정 불감증을 드러냄. 하지만 非기축통화국, 막대한 공기업 부채, 초고속 고령화, 재정승수 급락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우리 재정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의 세제개혁 △경제개혁을 통한 재정승수 제고 등이 시급. 이와 함께 재정이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진 ‘재정준칙’ 수립과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 감시기능’의 확립이 필요

## 1. 정부·여당의 건전재정 불감증 조장, 악화되는 국가재정

### □ 전대미문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 크게 악화

- 2020년, 9%대 초슈퍼예산에 추가경정예산 3차례 편성
  -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9.1%로 2019년에 이어 9%대로 편성
  - 정부 3차 추경안 35.3조원 제출
    - 1차(11.7조원), 2차(12.2조원)를 더하면 올 추경 총액은 59.2조원
    - 이는 올 본예산(512.3조원)의 11.6%에 해당하는 규모
  - 추경을 포함한 올 총지출 증가율은 16.5%로 증가
-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
  - 2020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전년(37.1%)비 6.4%p 급등
  -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5.8%, 국가채무 순증 99.4조원
    - 재정적자비율의 이전 최고기록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7%였음

〈표 1-1〉 2020년 3차 추경안과 국가재정

단위: 조원, %, GDP 대비 %

	'19년 본예산(A)	'20년			
		본예산	추경		
			1차	2차(B)	3차(C)
총수입	476.1	481.8	481.6	482.2	470.7
(증가율)	(6.5)	(1.2)	(1.2)	(1.3)	(-1.1)
총지출	469.6	512.3	523.1	531.1	547.1
(증가율)	(9.5)	(9.1)	(11.4)	(13.1)	(16.5)
통합재정수지	6.5	-30.5	-41.5	-48.9	-76.4
(GDP대비,%)	(0.3)	(-1.5)	(-2.1)	(-2.5)	(-4.0)
관리재정수지	-37.6	-71.5	-82.0	-89.4	-112.2
(GDP대비,%)	(-1.9)	(-3.5)	(-4.1)	(-4.5)	(-5.8)
국가채무	740.8	805.2	815.5	819.0	840.2
(GDP대비,%)	(37.1)	(39.8)	(41.2)	(41.4)	(43.5)
※ 국가채무 순증	32.6	64.4	74.7	78.2	99.4

\* 자료: 기획재정부

□ 하지만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양호하다며 국민 호도

○ 5월 25일 대통령 주재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발언 내용

- 文대통령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재정책대가 재정건전성 회복에 도움 된다는 ‘좋은 부채론’ 주장
  - 대통령 “길게 볼 때 (재정책대)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
  - 민주당대표 “국가채무의 총량보다 GDP총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
  - 경제수석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성장을 지탱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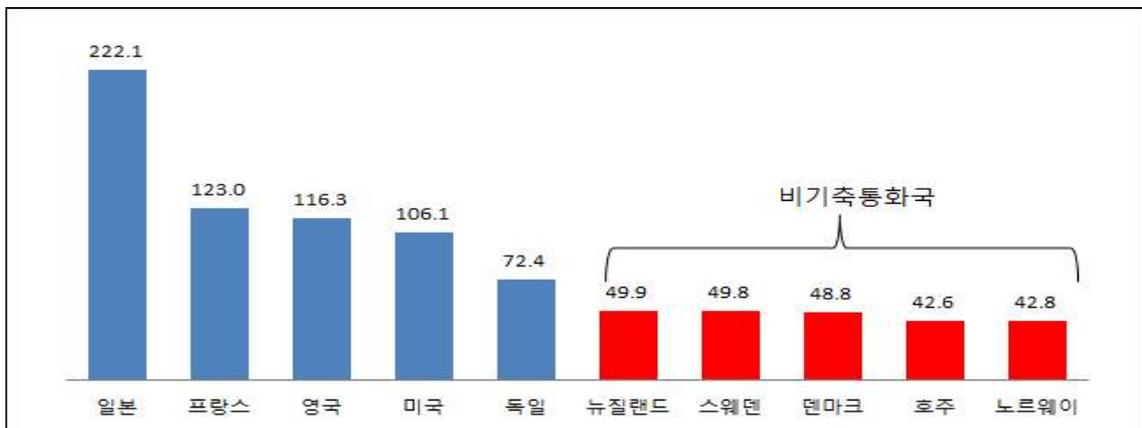
## 2. 국가재정, 정말 문제없나?

### □ 한국과 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비율 단순비교는 부적절

○ 기축통화국이 아닌 선진국들은 채무 비율을 낮게 유지

[그림 1-1] OECD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2017년)

단위: GDP 대비 %(일반정부 총부채기준)



○ 한국의 채무비율이 기축통화국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 원화하락으로 외국인 자본유출 가속화되고 금융시장 불안 가중
- 미국과는 달리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한국채권금리가 급등해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등 실물경제 충격 불가피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채무비율이 46%를 넘으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한 것도 바로 이 때문

### □ ‘숨겨진 빚’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이미 70%에 육박

○ 국가부채는 회계기준, 포함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표 1-2〉 국가부채 유형별 비교

유형	2018년 규모 (% of GDP)	포괄범위	산출기준
국가채무(D1)	680.5조원 (35.9%)	중앙 + 지방정부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일반정부 부채(D2)	759.7조원 (40.1%)	D1 + 非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공공부문 부채(D3)	1,078.0조원 (56.9%)	D2 + 非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 자료: 기획재정부

○ 국가 간 비교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채무기준은 D2인데 여기에는 한국의 특수성인 ‘비대한 공기업 부채’는 미포함

-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非금융공기업 부채는 387.6조원이며, 이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2018년말 GDP 대비 57%

□ 초고속의 고령화 감안하면 재정건전성은 취약

○ 2017년 고령사회(65세 비중 14% 이상)에 진입한 한국의 당시 국가 부채비율(D2)은 43.2%로 과거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 독일은 197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할 당시 국가부채 비율이 20%도 되지 않았고,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도 30% 미만

○ 특히 우리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빨라 부담 급증이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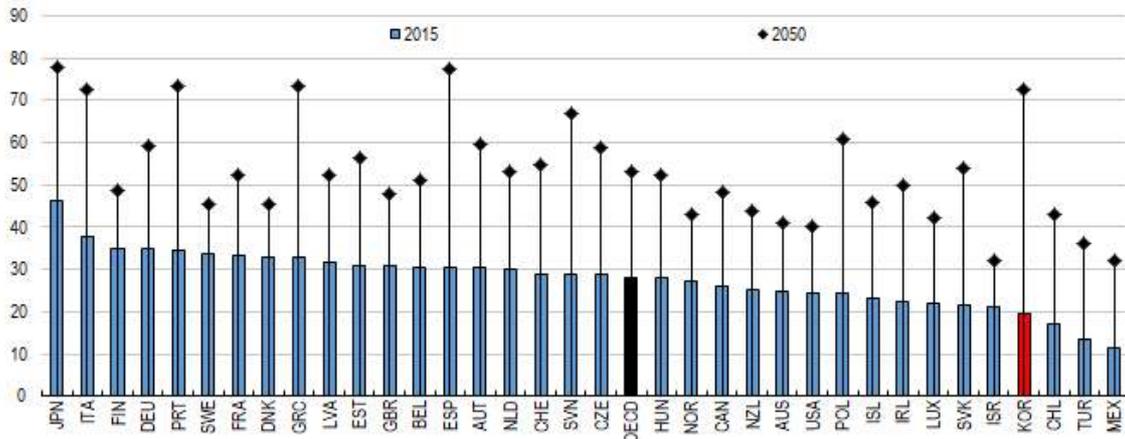
- OECD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19.4명에서 2050년 72.4명으로 45년간 약 3.7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반면 OECD 평균은 27.9명(2015년) → 53.2명(2050년)

- 이를 감안하면 GDP 대비 복지지출은 2017년 10.6%로 EU 평균(25.4%)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2060년에는 EU 평균(27%)을 넘는 28.6%에 달할 것으로 전망

[그림 1-2] 노인부양비율 급등 (2015→2050)

단위: 명(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 자료: OECD (2017), Pensions at a Glance.

## □ 국제비교 통계의 함정

-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OECD 통계가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단순비교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
  - 일례로 OECD 평균 채무비율 110%는 OECD를 한 나라로 보고 계산한 것으로 경제 및 채무 규모가 큰 미국과 일본의 비율에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국제비교시에는 부적절
  - 이보다는 2017년 OECD 각국의 채무비율을 평균한 82.5%가 국제비교에 더 적절
    - 실제로 OECD는 다음처럼 OECD-Average, OECD-Total을 동시에 제공

〈표 1-3〉 OECD 일반정부 부채비율: Average Vs. Total

Indicator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as a percentage of GDP				
Year	2007	2015	2016	2017	2018
Country					
OECD - Average	52.87	85.27	84.88	82.46	...
OECD - Total	73.05	111.53	112.48	110.31	...
Data extracted on 04 Jun 2020 07:20 UTC (GMT) from OECD.Stat					

\* 자료: OECD (화면 캡처)

□ 마이너스로 가는 재정승수<sup>1)</sup>... ‘좋은 부채론’의 오류

- 최근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재정승수가 2000년대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며 유효성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줌

〈표 1-4〉 한국 재정승수 관련 최근 주요 연구결과

연구자	주요 내용
이강구·허준영(2017)	정부지출 누적승수(1년 0.30, 3년 0.46)
김태봉·허석(2017)	통계적 유의성 낮고 재정승수가 작고 긴 시차
국회예산정책처(2019)	재화·용역지출의 승수 하락세 0.80(2014)→0.56(2017)
김원기(2019)	정부지출 누적승수(1년 0.24, 3년 0.50)

- 더구나 조경엽(2020)은 재정지출이 증세가 아닌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경우 재정승수는 마이너스(-)로 낮아진다고 분석<sup>2)</sup>
  - 선진 28개국 자료(1980~2019년)의 분석 결과, 적자국채로 조달한 재정지출비율(GDP대비)이 1% 증가하면 우리나라 1인당 GDP증가율은 오히려 -0.034~-0.073% 하락

1)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2) 조경엽(2020)은 기존 연구에서 재정승수가 그나마 양으로 추정된 이유는 증세와 적자국채의 비용 차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3. 재정건전성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① △총지출 감소, △총수입 증가, △명목GDP증가

$$\text{국가채무비율(\%)} = \frac{\text{국가채무액}(= \sum \text{총지출} - \sum \text{총수입})}{\text{명목 GDP}}$$

#### ▶ 총지출감소 ←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 국가적 우선순위, 재정사업 적절성에 입각한 기존 사업의 과감한 정리
- R&D, 중소벤처육성, 교육훈련 등 미시적 차원에 더 집중해 재정 효율성 제고
- 재정 유연성 확보를 위한 의무적 지출 증가 억제
  -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아동수당·건강보험 등이 급격히 추진되면서 의무지출이 국가 예산의 절반인 50%를 넘는 재정의 경성화가 진행되고 있음
- 無조건부 복지에 반대급부를 부가함으로써 재정절감 효과를 추구
  - 예를 들어 무상급식, 아동수당 지급시, 해당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설문조사를 의무화할 경우 향후 정책 효과분석, 개선점 도출 등에 활용함으로써 재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 총수입증가 ←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입각한 세제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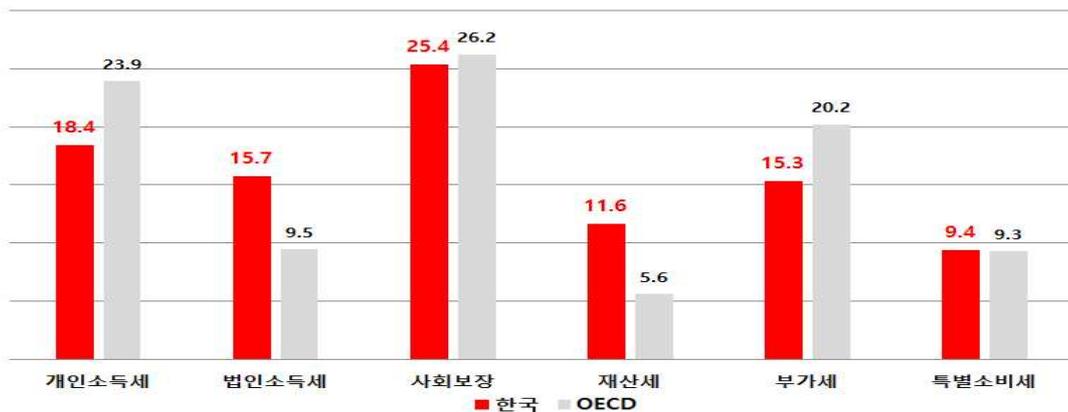
- 물론 OECD 대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아 증세 여지 있음
  - 2018년 한국의 조세수입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OECD 평균(25%)보다 약 5%포인트 낮음

○ 하지만 특정계층에 조세부담을 전가하는 식이 아닌 형평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세제개편과 세입 확충 필요

-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 39%는 전혀 내지 않는 반면, 상위 10%가 총 세액의 86%를 내고 있으며, 법인세는 상위 1%가 74% 부담하는 세금 쏠림현상이 큰 상황
- 따라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대원칙에 입각해 세수 항목별 비중을 고려할 필요
- OECD 국가와의 세수구조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부가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와 재산 관련 취득등록세 부담은 높은 편

[그림 1-3] 한국과 OECD의 세수구조 비교

단위: % of 전체 세수, 2018년



▶ 명목GDP 증가 ⇐ 재정승수 제고 ⇐ 반(反)시장 정책 결별

○ 신산업의 발전을 막는 기득권 규제 개혁

- 특히 이번 코로나 경험은 원격의료, 원격수업의 확대가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집단감염확산 방지, 수업일수 확보 등 향후 반복될 감염병 위기 대응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임을 보여줌

○ 고용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 개혁

- 한시적 허용한 특별근로 연장을 넘어 구조적으로 고용을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 징벌적 ‘편가르기’가 아닌 경제효율적인 세제시스템 구축

-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법인세 및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부자 증세’ 방식으로는 세수증대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칫 고액자산가나 기업들의 해외 이탈 확대 등 부작용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② 엄격한 재정준칙 법제화

○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수준이 되어야 함

-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최근 ‘유연한’ 재정준칙론은 정치권으로 하여금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지침으로 인식될 여지

○ 이에 미래통합당은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2~3%를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 법안의 제정·개정을 추진

〈표 1-5〉 21대 국회, 재정건전성 관련 발의 주요 법안

법안 및 발의인	주요 내용
재정건전화법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국가채무비율: 45%) ‘45% 초과시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모두 사용’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2%)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2 이하로 유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국가채무비율 45%) 45% 초과시 5회계연도 이내의 기간 동안 감축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

- 하지만 3차 추경안, 명목GDP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올 국가채무비율이 45%에 육박한 만큼 좀 더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 명목GDP 증가율이 4.0%일 경우 국가채무비율을 45% 이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상한은 1.7%

〈표 1-6〉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상한

		명목GDP증가율(%)							
		1.5	2.0	2.5	3.0	3.5	4.0	4.5	5.0
국가채무비율 상한 (%)	40	0.6	0.8	1.0	1.2	1.4	1.5	1.7	1.9
	45	0.7	0.9	1.1	1.3	1.5	1.7	1.9	2.1
	50	0.7	1.0	1.2	1.5	1.7	1.9	2.2	2.4
	55	0.8	1.1	1.3	1.6	1.9	2.1	2.4	2.6
	60	0.9	1.2	1.5	1.7	2.0	2.3	2.6	2.9
	65	1.0	1.3	1.6	1.9	2.2	2.5	2.8	3.1
	70	1.0	1.4	1.7	2.0	2.4	2.7	3.0	3.3

\* 자료: 김우철(2020)

### ③ 새로운 재정 거버넌스 구축<sup>3)</sup>

- ‘재정준칙’과 함께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정치중립적 감시기능’이 확립될 필요
-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의회예산처, 행정부의 독립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중립적 감시위원회 제도를 도입
- 2012년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이슈를 제기해오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그 기능을 맡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3) 지난 6월 15일 여의도연구원, 국회의원 추경호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옥동석 인천대 교수의 토론문 내용을 정리한 것임

- 하지만 OECD는 NABO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매 2년마다(국회의장이 바뀔 때) NABO 처장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현재의 관행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상한 것이다. NABO의 리더십이 정치적 이익에 좌우된다고 인식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 NABO의 독립제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유사한 거버넌스 체제로 변경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중립적 견제기능이 작동하도록 보장할 필요

#### <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2019),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

김우철(2020), “패러다임 전환기의 재정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공동 경제 학술대회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 발표자료.

김원기(2019), “FAVAR 모형을 이용한 한국 정부지출의 효과 분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25권 제3호.

김태봉·허석균(2017), “한국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논의: SVAR 추정법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23권 제3호.

이강구·허준영(2017), “한국의 재정승수 연구: 베이지안 VAR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제23권 제1호.

조경엽(2020), “한국의 재정승수 추정 및 시사점”, 여의도연구원·국회의원 추경호 공동 주최 정책토론회 「고비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발표자료.

## II.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작성: 김신의 연구원 (kim.shin.ui@ydi.or.kr)

4차 산업 시대·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 됨. 현재 공공데이터의 경우 부처별로 각기 생산 관리 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며, 민간분야에서도 기업별 역량이 천차만별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 이에 △중·장기 데이터 전략 수립 △법·제도 혁신 △표준·거래 지침 제시 △분쟁 조정기능 역할 등을 담당할 거버넌스 기구설립 필요

### 1. 데이터청 설립의 필요성

- (4차 산업 시대)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 시대를 이끌 첨단기술의 핵심
  - 데이터 경제의 부상으로 데이터가 새로운 자산으로 등장하였으며, 공공·민간 분야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를 산업과 정책에 연계시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됨
-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로 디지털 데이터 역량의 중요성 확대
  -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재택근무(원격업무), 온라인 개학 등 일상의 변화를 대비하는 새로운 산업·공공 서비스 육성 필요
- (글로벌 데이터 주도권 선점) 전 세계 사회 전반으로 온라인·비대면·비접촉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화(化)'가 촉진됨에 따라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글로벌 데이터 주도권 선점 중요

- 해외의 경우 공공과 민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 전국단위 조직 신설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나, 국가 차원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 추진 중

## 2. 現 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 (컨트롤타워 부재) 현재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총괄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을 전담하는 조직 없음
  - 공공분야 데이터는 정부 부처별로 각각 데이터를 축적·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전문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한계
  - 민간의 경우 기업별로 데이터 관리·활용 역량이 천차만별인 상황으로, 데이터 활용·거래 생태계 조성 초기 단계
    - ※ 중소기업 102곳 중 80%에 해당하는 82개 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함(중소기업중앙회, MBN, 매일경제 설문 조사 결과 2019.8.22.)
- (담당 기관 산재)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곳, 민간과 협력을 돕는 곳,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곳이 각기 다른 기관인 상황
- (법안·정책 지원 부재) 국회 내 4차산업위원회가 있으나 상설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상임위조차 과방위·행안위·산중위·정무위로 산재되어 있음

〈표 II-1〉 데이터 관련 정부 기관 현황

담당부처 (데이터관련 산하기관)	역할	주요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데이터산업 총괄 역할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유통·활용 증진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마이데이터 사업('19~) 스타트업·중소기업 데이터 수집 가공 지원(kdata.or.kr)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공공기관 데이터 수집·개방·활용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빅데이터 분석 포털(bigdata.go.kr)'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예정 - 데이터3법 시행 20.8.5)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국민권리구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위법행위 감시
금융위원회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정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신용정보법 개정,'20.2) '금융 데이터 거래소'구축 시범운영(금융보안원, '20.5~)

### 3. 데이터청 설립 관련 정부·여당 방향

- 행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청' 설립 등에 관한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은 단계이나, '디지털 뉴딜' 정책의 연장으로 일자리 창출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중심으로 논의 시작

※ 문재인 대통령 춘천 데이터·SI기업 방문, '디지털담' 개념 언급(6.18)

- 민주당 '데이터청·데이터거래소 설립' 당론 발의 추진

- △데이터 컨트롤타워 신설 △분야별 데이터거래소 설립 △참여소득 지급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 추진(이광재 의원)

- 그 외 △데이터 기본소득 법안 추진(소병훈 의원) △빅데이터 기본배당(우원식 의원) △경기도 데이터 배당제(2.20시행), 데이터세 도입(이재명 지사) 등 주장

## 4. 향후 과제

### ○ ‘데이터청’ 설립 시 그 역할과 기능 검토 필요

- (통합관리)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민간 데이터를 포괄하여 접근·관리하는 기능 필요
- (표준·거래 가이드라인 관리) 코드, 용어, 데이터 도메인, 메타데이터 등 데이터에 일괄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에 상응하는 표준 수립 필요
  - 데이터 거래 역시 표준절차, 표준 계약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유통 거래 지침 마련 통해 민간·공공분야에서 활발한 시장 생길 수 있도록 여건 조성 필요
- (법·제도 혁신) 기존의 법과 충돌되는 것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기반 확립 통해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데이터 활용은 촉진되는 방향의 일관된 제도 혁신 추진 필요
- (분쟁 조정) 공공·민간 분야 데이터 분쟁 시 권리 구제받을 수 있는 조정 역할 필요

### ○ 다만, 기존 부처와의 역할 구분 및 독립성 확보 방안 검토 필수적

- 집행 기관의 위상과 지위 정립 문제(법령제정권 포함 여부 등), 기존 조직과 역할 분담 체계, 現 소관별 관리 체계의 장단점, 기타 관련 정책·법안 간 연계 종합 검토 필요

□ 범정부 조직기구 통한 데이터 전략 계획 수립

○ 대통령 국정과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의 하나로 「데이터전략자산 범정부기구(Leveraging Data as a Strategic Asset Cross Agency Priority)<sup>1)</sup>」를 운영.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분기별로 연방 데이터전략 실행계획(Action Plan) 발표 중

※ 미국 정부의 데이터 관련 예산은 연간 1조 달러(\$1 trillion) 규모<sup>2)</sup>

○ 「데이터전략자산 범정부기구」 내에 ‘연방데이터전략개발팀(Federal Data Strategy Development Team)’과 ‘자문그룹(Federal Data Strategy Development Alumni)’ 두어 데이터 전략 개발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

- 「데이터전략자산 범정부기구」는 각 핵심 부처 최고 책임자 5인으로 구성
  - 상무부 차관, 과학기술정책국 국장, 대통령실 기획예산처 연방최고 정보 관리국 최고관리책임자, 대통령실 기획예산처 정보규제국 부국장, 중소기업청 최고정보 책임자
- ‘연방데이터전략개발팀’은 전 부처<sup>3)</sup>에서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시니어급 실무자 58명이 전담

[2020년 데이터 전략 실행 계획<sup>4)</sup>]

- 10개의 대원칙(윤리, 책임, 투명성 등)과 40개의 과제, 20개 세부시행계획 발표
- 2020년 미국 데이터 전략 주요 과제
  - 다양한 데이터 거버넌스 기구 구성(~'20.1월)
  - 연방 CDO(데이터최고책임자) 위원회 출범(~'20.1)
  - 연방정부데이터정책위원회 신설(~'20.1)
  - 데이터 표준화 저장소 개발(~'20.12)
  - 데이터 품질 측정 및 보고 가이드 개발(~'20.9)
  - 데이터 역량 카탈로그 개발(~'20.1)
  -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 개발(~'20.12)
  - 원스톱 표준화 포털 시범 연구(~'20.3)

1) <https://www.performance.gov/CAP/leveragingdata/>  
<https://strategy.data.gov/> :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중소기업청(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기획예산처(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과학기술 정책국(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공동 주도

2) <https://www.commerce.gov/data-and-reports>

3) 상무부, 환경부, 국방부, 보건부, 국립과학재단, 대통령실 등

4) ‘연방데이터전략 - 2020 Action Plan’ <https://strategy.data.gov/assets/docs/2020-federal-data-strategy-action-plan.pdf>

### Ⅲ. '남북 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선언'을 중심

작성: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최근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남 강경도발 위협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체결된 '6·15 선언'이 얼마나 잘 실현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20년전 6월,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6·15선언'에 서명했으나, 실상 북핵 폐기를 통한 평화라기보다는 연방제통일에 방점을 둔 것이었고, 북핵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허약한 평화'였음이 증명. 특히 북한은 지속적으로 '6·15선언'의 가치를 훼손하는 도발을 자행해 왔으며, '하노이 노딜' 이후엔 대북제재 완화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상황. 이런 차원에서 '6·15선언'은 더 이상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아닌 바 '사망 선고'를 내리고, 앞으로는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고, 군사도발에는 단호한 대비태세로 응징하며, 대북제재를 더욱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1. 20년 된 '6·15선언'의 대차대조표

- 금년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 현 시점에서 '6·15선언'의 가치가 얼마나 잘 실현되었는지 점검하고, 이를 남북관계에 반영
  - '6·15선언'은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헌정 사상 최초로 만났다는 점에서 유의미
    - 5개 합의 내용 중 연방제통일을 비롯한 항목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 만남 자체를 평가절하 하는 건 곤란
  - 문제는 '6·15선언'으로 한반도평화의 문이 활짝 열렸던 환상이 자리
    - 김대중 대통령은 귀국 후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고 공언했고, 국민들도 항구적 평화의 도래에 대한 기대에 부푼

- 특히, 현 북핵 능력의 고도화 정도로 볼 때, ‘6·15선언’ 당시 우리가 북한 핵위협에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함
  - 북핵위협을 외면한 ‘6·15선언’은 ‘허약한 평화’로 인식됐고,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의 발발로 ‘허약한 평화’가 곧바로 입증
    - ※ 북핵 질주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지원까지 함. 즉,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 “통일 후 우리 것이 된다”, “비핵화는 김일성 유훈이다” 등
  - 결국, 허약한 평화는 “전쟁이나, 평화냐”의 구조로 변해 우리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고, 北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며 ‘허약한 평화’도 사라질 운명에 놓임
- 이렇게 볼 때, 20년이 된 지금 ‘6·15선언’이 한반도평화의 가치를 잘 지켰는지 평가하는 것은 시대적 책무이자 과제
  - ‘6·15선언’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서 20년 전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
    - ① 한반도에 전쟁 위협은 감소되었는가? ② 북핵 해결책이 마련되었는가?
    - ③ 개혁·개방이 진전되었는가? ④ 북한의 도발은 반복되지 않는가? 등
  - 상기 4개 항목에 입각해 평가해 본다면,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

## 2. 北, ‘6·15선언’의 가치 훼손과 도발 원인

- 북한에서 ‘6·15선언’은 강령적 선언으로, 이후 체결된 선언(‘10.4선언’,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등)보다 상위로 규정
  - 그 이유는 ‘6·15선언’의 경우, 북한주도로 연방제통일 조항을 포함 시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활용·강조할 수 있기 때문
    - 즉, ‘6·15선언’은 평화보다 통일에 방점을 둔 선언으로 애초에 평화증진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

○ 북한에 의한 평화 훼손·파기 행위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2000년 이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00년 이후 북한에 의한 평화파괴 행위는 주로 서해에서 자행

※ 제2의 연평해전(2002.6.29), 대청해전(2009.11.10), 천안함 폭침(2010.3.26), 연평도 포격(2010.11.23)

※ 또한, 6차례의 핵실험과 수십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평화를 훼손·파기

-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핵 있는 평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

※ 2013년 핵·경제병진발전 노선 채택, 2018년 핵무기의 병기화 실현 공식화 등

- 이처럼 북한의 ‘핵있는 평화’는 평화의 가치를 심대하게 손상시킴은 물론,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자 ‘6·15선언’의 가치도 훼손

○ 문제는 최근들어 평화 훼손·파기 행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

- 북한은 ‘6·15선언’ 20주년을 앞두고 ‘6·15선언’ 파기에 돌입

-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진두지휘하는 것 같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

• 즉, 대북전단은 일종의 빌미이고 김정은의 지시로 김여정이 ‘배드캡’ (bad cop)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

※ 최근 북한 도발 일지(〈표 Ⅲ-1〉 참조)

- 북한이 ‘6·15선언’을 앞세운 대남도발을 감행하는 점을 주목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

○ 그렇다면 북한이 벌이는 도발의 원인을 무엇일까?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 심화” 때문

- 2017년 이후 3차례의 제재안은 모든 유엔회원국에 제재이행에 강제성 의무를 부여
  - 강제성 의무 부여로 해외노동자 파견이 종료(2019.12.22.)되면서 5억 달러 내외의 통치자금 조달에 적신히
  - 경제성장률 추락(2017: -3.5%, 2018: -4.1%, 2020: -6% 예상), 정제유 도입량 축소(2016: 500만 배럴, 2018: 50만 배럴) 등
- 또한, 2020년 1월 ‘코로나 19’ 유입 차단을 위한 북중 국경봉쇄도 북한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
  - ※ 2020년 1~2월 누적 북중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71%, 수입도 23% 급락했고, 2020년 3월부터 대중국 수출은 96%, 수입도 90% 하락
- 이에 북한당국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진행 중이며, 탈출구로 한국을 압박해 제재완화와 대남 경제적 지원을 얻어낸다는 전략

### 3. 향후 과제: 북한 경제위기를 기회로 활용

#### □ 북한의 부당성에 대한 당당한 대응

##### ○ ‘당당함’ 유지의 중요성

- 북한의 무례한 언동과 도발 시위에 당당함을 유지해야 함
  -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무례와 조롱이 심각해짐에도, 침묵으로 일관
-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굴종적 태도와 침묵이 국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다는 점임
  - 특히, 정부는 ‘남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북한의 무례를 정당화하는 행태를 보이며, 이를 비판하면 반민족·반통일세력으로 매도
- 우리가 대북 ‘당당함’을 상실하는 순간 당면현안 해결은 고사하고, 북한의 대남통일전술에 역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의 대북전단 관련 굴종적(?) 태도와 북의 반격

- 지난 6.4(목) 이후 김여정은 탈북민의 대북전단을 핑계로 文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 및 공세와 대남 위기수준을 높이고 있음

※ 北의 전단 살포 경고: △김여정 담화(6.4), △연락사무소 폭파(6.16), △4대 군사행동 지침(6.17), △대남전단 실물 공개(6.20) 등

- 그런데 정부는 김여정의 항의 4시간 만에 ‘굴종적’ 정책들을 남발

※ 정부의 굴종적 행태: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 예고,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 고발,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자 현행범 체포 등

-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정부의 이런 굴종적 태도를 보고 북한은 對南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

※ 대남 공세수위 강화: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6.9),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6.16), △북한군 총참모부 ‘4대 군사행동 지침’ 하달(6.17) 등

○ ‘당당함’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 정부는 대화를 통해 현안을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 고충은 이해됨

- 그러나 국민들은 남북대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북한의 무례를 눈감아 주는 비굴한 대화와 굴종적 평화를 원하지 않음

- 따라서, 북한의 무례한 언행과 행동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 즉, 대한민국 재산 훼손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연락사무소는 국민세금 180억 원이 들어간 한국의 재산이므로, 북한의 이번 폭파는 불법행위란 점을 분명히 전달

- 아울러, △손해배상(원상복구 등) 요구,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및 예방대책 등도 적극 마련

## □ 북한의 도발행동계획에 대한 대비책 마련

### ○ 북한의 대남도발의 유형

- 대북전단은 대남압박을 위한 하나의 핑계 거리로서, 북한은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대남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임
  - ※ 향후 北의 예상 행보: △개성 등에 병력 전진 배치, △대남전단 살포, △MDL 또는 NLL 등 국지도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 아울러 ICBM이나 SLBM 발사 등 전략적 도발도 가능성도 불배제. 시기는 8월 한미연합훈련 또는 노동당창당일(10.10) 전후로 예상

### ○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

- 도발 목적은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 때문에 흥흥해진 민심을 다잡기 위함으로 한국을 대적관계로 전환한 것도 그 일환
- 따라서 우리는 북한 도발 형태에 따라 다양한 예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
  - 특히 한미동맹은 북한도발 억제에 중요한 수단인 바, 한미공조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협력 태세를 갖춰가야 함

## □ 대북경제제재로 북핵 폐기의 길 찾기

### ○ 북한경제 상황은 '제2의 고난의 행군기'와 맞먹는 수준

- 최근 북한경제는 안보리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며 외화 고갈로 인한 위기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북중 국경봉쇄 등이 겹치면서 주민들의 생활고에 대한 불만이 폭주

- 평양주민들이 생활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이 북한의 심각한 경제 상황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임
  - 일각에선 현재 북한경제는 '제2의 고난의 행군기'에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란 평가가 속출
- 현 북한의 경제위기는 북한사회변동의 촉매제로 활용 가능
- 이런 북한경제위기의 정황은 2017년 말부터 나타났고, 제재가 지속 되는 한 경제위기는 더 심각해질 걸로 예상
  - 한 국가의 사회변동 원인은 다양한데, △경제위기, △시민사회와 종교 단체의 역할, △불평등 확산, 외부정보 유입 등이 그것
  - 따라서 북한이 사회변동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당면과제인데, 관건은 실효성 있는 경제제재의 지속
  - 이를 기반으로 북핵 폐기의 길을 찾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굳건한 한미 공조 유지가 필수
  - 한편, 정부의 민족공조 유혹에 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전국민의 적극적인 감시활동 강화가 필요

〈표 Ⅲ-1〉 2020년 3월 이후 북한의 대남 도발 일지

일시	주체(형식)	주요내용
3.3	김여정 당 제1부부장(담화)	- 북한 훈련에 유감 표명한 청와대를 직접 비난
5.3	북한군	- 남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를 향해 총격
6.4	김여정 당 제1부부장(담화)	-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 - 남북연락사무소 및 개성공단폐쇄, 금강산 시설 철거, 군사합의 파기 거론
6.5	통일전선부 대변인(담화)	- 남한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개성공단 폐쇄
6.9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사업총화회의발언)	- 남북간 핫라인 차단 발표
6.12	리선권 외무상(담화)	-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
	장금철 통일전선부장(담화)	- 남조선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게 참으로 후회스러울 것
6.13	권정근 외무성미국담당국장(담화)	-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담화)	- 총참모부를 통한 대적행동의 행사권 선포
6.16	총참모부(공개보도)	- 비무장지대 군사배치 및 요새화, 군사행동계획 작성
	북한 군	-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6.17	김여정 당 제1부부장(담화)	- '6·15 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 비난
	장금철 통일전선부장(담화)	- 청와대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성명 비난
	조선중앙통신	- 한국 정부의 특사파견 요청 사실을 공개
	총참모부 대변인발표	- 구체적 대적 군사행동계획 발표 ▶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배치 ▶ 비무장 지대 내 GP 경계근무 ▶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안전대책 ▶ 대남전단 살포 투쟁(예고)선언
6.20	조선중앙통신	- 대남전단 내용 및 살포준비 현황 사진 공개
6.21	통전부 대변인(담화)	- 남북합의가 휴지장이 됨 - 대남전단 살포 변경의사 없음을 다시 강조

## 이슈브리프 목록 (최근 발간順, 2018.10.11~現在)

### 이슈브리프 2020-05 (발간일: 2020.5.28)

- ▶ '전국민 고용보험제' 우파적 대안 모색 시급 ▶ '김정은 신변이상설': 대응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 ▶ 영국 보수당의 장수 비결과 시사점

### 이슈브리프 2020-04 (발간일: 2020.4.2)

- ▶ 역대 총선에서의 사전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시사점 ▶ 文정권 정책평가와 국정지지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 ▶ 'n번방' 사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해외사례 검토 ▶ 신종 코로나 충격의 고용감소 추정과 시사점

### 이슈브리프 2020-03 (발간일: 2020.3.12)

- ▶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 보기” ▶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 이슈브리프 2020-02 (발간일: 2020.2.13)

- ▶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Top 10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 이슈브리프 2020-01 (발간일: 2020.1.16)

- ▶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 이슈브리프 2019-11 (발간일: 2019.12.19)

- ▶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 2019 펭수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 이슈브리프 2019-10 (발간일: 2019.11.21)

- ▶ 탈북자 강제복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 ▶ 위험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 이슈브리프 2019-09 (발간일: 2019.10.31)

- ▶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악(改惡)' ▶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 이슈브리프 2019-08 (발간일: 2019.10.10)

- ▶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 이슈브리프 2019-07 (발간일: 2019.9.19)

- ▶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 이슈브리프 2019-06 (발간일: 2019.8.29)

-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이슈브리프 2019-05** (발간일: 2019.3.14)

▶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 유튜브 '슈퍼챗' 논란, 정치자금법의 한계와 시사점 ▶ (현안보고) 베트남 미북회담 '노딜': 원인, 평가, 전망

**이슈브리프 2019-04** (발간일: 2019.2.28)

▶ 궤변으로 덮을 수 없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 ▶ 사용자 제로, 제로페이 ▶ 자치경찰제,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실패 우려 ▶ (현안보고) 2차 미북정상회담 전망: 쟁점과 대책

**이슈브리프 2019-03** (발간일: 2019.2.14)

▶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 ▶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 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 (현안보고)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패(必敗) 경고음"

**이슈브리프 2019-02** (발간일: 2019.1.24)

▶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과세기준 개편 필요

**이슈브리프 2019-01** (발간일: 2019.1.10)

▶ 저출산 인식에 대한 우리 당의 반성과 인식의 전환 ▶ 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없애려고 하는가? ▶ 거짓 통계로 오염된 한국의 소득분배 ▶ (현안보고) 북한 및 한반도 정세: 평가, 전망, 대응

**이슈브리프 2018-24** (발간일: 2018.12.20)

▶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시사점 ▶ 2018 유럽연합(EU) 청소년 정책 방향과 시사점 ▶ 인공지능(AI)과 정치인의 미래 ▶ (현안보고)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분석 결과

**이슈브리프 2018-23** (발간일: 2018.12.6)

▶ 광주형 일자리, 의의와 한계 ▶ 생계형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인들 ▶ 왜 미국 중간선거에는 가짜뉴스가 없었나 ▶ (현안보고) 자유한국 i노믹스(inomics) 해설

**이슈브리프 2018-22** (발간일: 2018.11.22)

▶ 미세먼지 피해는 커지는데 대책은 제자리걸음 ▶ 해외 주요 방송사의 현황 및 시사점 ▶ 성 혐오 갈등 사태로 본 건강한 토론장의 필요성 ▶ (현안보고)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과 그 시사점 ▶ (현안보고) 정부·여당의 사립유치원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브리프 2018-21** (발간일: 2018.11.8)

▶ 경제 현실을 외면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 자유한국당의 선거전문가정당화를 위한 모색 ▶ 남북합의 비준 논란 관련 핵심 쟁점 및 평가 ▶ (현안보고) 공공기관 고용세습 사태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8-20** (발간일: 2018.10.25)

▶ 고용세습으로 드러난 귀족노조의 좌파기득권 ▶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그린벨트 地價마저 올리는 부동산대책 ▶ (현안보고)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과 과제

**이슈브리프 2018-19** (발간일: 2018.10.11)

▶ 충격적 일자리 재난사태의 해법 ▶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비판적 평가 및 전망 ▶ 사회서비스원은 일자리 정책이 아닌 복지정책



---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미래통합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